

사랑을 바꾸면 광명이 바뀌는니다!

제22대 총선 광명(을) 예비후보

# 양이원영 보도자료



더불어  
민주당

(우)14248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603호(송화빌딩) | E. yangyi.assembly@gmail.com | 010-2651-8402(선거사무실)

수신: 각 언론사	날짜: 2024년 2월 6일 (화)
문의: 김창민 보좌관 (010-3918-1862)	기자회견문 : pp1~4 공약설명자료: pp5~8

## [양이원영 광명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우리 손으로 만드는 빛나는 광명 제1호 공약,

광명형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 구축

**“광명시의 대규모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에**

**광명시민과 광명기업을 ‘우선고용’, ‘우선협력’ 토록해**

**지역순환경제 모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양이원영입니다.

오늘은 ‘우리손으로 만드는 빛나는 광명 제1호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형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 구축”입니다.

이 공약은 광명시의 대규모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에  
광명시민의 우선고용과 광명기업의 우선협력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

-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 ▲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 구름산지구 등

향후 30년 간 대규모 건설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앞으로 광명 전체가 공사판이 된다고  
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주민들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혼잡, 그리고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건설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보다는  
외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근 대기업 시행사의 부실공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광명시를 ‘지역순환경제 모범도시’로 만들기 위해  
광명시민을 우선고용하고 광명기업과 우선협력하도록 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전후로 국제사회는  
자국민 고용 보호와 자국 내 생산·제조·구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와 영국 프레스턴은 지역 경제 순환을 위해  
‘지역 제품 우선구매’와 ‘지역 주민 우선고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시행하였던,  
지역화폐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정책도  
지역순환경제의 일환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빛나는 광명’을 만들기 위해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약속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규모 건설 인프라 구축 사업에  
광명시민을 우선고용하고 광명 기업과 우선협력하도록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현재 14개 광역 지자체와 74개 기초 지자체는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업의 고용을 권고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는 단순한 권고에만 그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22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제정을  
통해 현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숙련된 건설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숙련건설기능인교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를 통해

신규 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훈련받아  
신속하게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경력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더욱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고용기업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높은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아파트 및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 전문가,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건설 감독’ 및 ‘감리단’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노동 및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현장의 부조리,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등 위법 부당 시공을 적발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 사업’을 광명에서 시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에만 적용 중인 해당 사업을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명시에서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지역민 우선고용 및 지역기업 활성화 법안’ 등을 제정할 것입니다.

저의 선거 슬로건은 ‘시민을 빛나게, 광명을 품격있게’입니다. 광명 시민들이 지역정치의 주체이며, 광명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광명시의 명성과 품격을 높이겠다는 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광명시에서의 혁신과 성공의 경험을 국가 아젠다로 발전시켜갈 것입니다.

이 공약은 광명 지역의 대표적인 노동단체인 광명건설기능인협동조합과 한국노총 광명지부와 함께 했습니다. 각 단체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오늘 노동단체와 함께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퇴행시킨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해 노동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 양의원영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지역공약 제1호

### 슬로건 시민을 빛나게, 광명을 품격있게

- 슬로건은 광명의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주체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광명시가 가진 도시의 양적, 질적 명성과 품격을 높ی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음
- ‘시민을 빛나게’는 우리 시민들이 개인적 차원과 커뮤니티 차원에서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
- ‘광명을 품격 있게’는 도시의 물리적, 경제적 인프라는 물론이고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인 질을 높여 성숙하고 세련된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우리 손으로 만드는 빛나는 광명 제1호 공약, 광명형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 구축

“광명시에서 진행될 대규모 도시인프라 구축사업에  
광명시민과 광명기업 우선고용, 우선협력토록 하겠습니다.”

#### 1 배경

- 현재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구름산지구 등 향후 30년 간 대규모 건설공사가 이어질 예정임
- 대규모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은 건설현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먼지·혼잡·위험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건설사업 소득도 광명시 외 기업들에게 주로 집중돼 있음

- 특히 대기업 건설 시행사의 부실공사로 인한 위험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미숙련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 지목되고 있음
- 코로나-19 전후로 국제사회는 美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계획(Buy America Plan)처럼 자국민 고용 보호는 물론이고, 자국 내 생산, 제조 등을 의무화하는 추세임
- 미국 클리블랜드와 영국의 프레스턴은 ‘공동체 부 구축 전략’ 실현을 위해, 지역의 경제순환을 위해 지역 기업 우선 구매나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정책을 시행하였음

## 2 추진내용

- **약속**
  - 광명시에서 진행될 대규모 건설사업에 광명시민과 광명기업 우선 고용, 우선 협력
  - 숙련건설기능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건설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
  - 지역 차원 민관 합동 ‘건설 감독’·‘감리단’ 설치·운영을 통해 근로안전 및 부실공사 사전예방
- **내용 1 : 건설사업에 지역주민과 지역기업 우선 고용 제도화**
  - 정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고용과 지역 재화와 서비스 구매 촉진을 의무화하고 있음
  - 정부는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주민 우선 고용을 고려토록 하고 있음
  -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14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건설노동자 및 지역건설기업 고용을 권고
  - 광명시를 포함한 73개 기초 지자체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건설노동자 및 지역건설기업 고용을 권고

[표] 지역주민 및 지역기업 우선 고용 관련 법규

법안명	주요내용
「지방대 육성법」 제13조 제2항 < 2024년 1월 25일 개정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35이상으로 의무화 함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제1항, 제29조의5 제1항	이전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함  이전공공기관은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제주특별법」 제147조 제3항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에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2조 제6호	지역재투자의 정의에 ▲시와 공공기관 등의 지역기업제품 구매촉진, ▲지역 내 현지생산 부품의 조달, ▲지역인재의 채용 등 지역공용률의 제고 등을 담고 있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4조 제1항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사용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5항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제4조, 제6조	시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시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의무화

■ **내용2** : 지역 차원 민관 합동 ‘건설 감독’·‘감리단’ 설치.운영

- 주민, 전문가,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건설 감독’ 및 ‘감리단’ 설치 및 운영
- 민관 건설 감독.감리단의 역할
  - 건설현장의 근로 및 안전 감독 및 예방
  -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 설계변경 등의 검토·확인
  - 공사현장의 부조리,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위법

부당 시공 적발시 시정 건의

- 공사 시행 시 의견개진 및 지역주민의 동향 전달
- 지역주민의 민원 관련사항에 대한 발주청과의 협의 의견 조정
- 그 밖에 해당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항에 대한 중재 역할 등

- 경기도는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울시는 2022년 7월 16일 공공감리단을 신설하였음. 현행 감리제도가 시행사나 시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부실 감리 위험이 높기 때문임
- 순천시는 기적의 생태놀이터 건설 과정 중 어린이 감리단을 운영해 어린이의 관점에서 놀이터를 조성하였음

#### ▪ 기대효과

- 지역주민이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주택과 인프라 건설
- 지역일자리 창출로 광명시민의 소득증대와 광명경제 활성화
-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으로 광명시의 혁신 성과 확산

### 3 추진방안

- 1단계 고용노동부, 상생형 일자리 컨설팅
- 2단계 산업통상자원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 사업
  -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을 위해 노사 상생을 통한 지역투자형 일자리 모델의 발굴·확산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가 가장 대표적.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사업에 대한 확대 필요
- 3단계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촉진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 또는 「민관 합동 건설 감독·감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